

# 진전없는 야권통합, 손학규 책임론

## 민주당 지도부 '대통합' 필요성 잇단 제기

## 민노·진보 '소통합'은 국참당 문제로 '삐걱'

야권 통합이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합'을 공식 제안했으나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진보정당은 '소통합'을 시도하며 반기를 들고 있다. 소통합을 추진하는 진보 정당 사이에서도 국민참여당의 참여 여부를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통합 논의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야권 대통합'을 공식화하고 '야 4당 통합특위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이후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도 잇따라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가 진보 정당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소통합'에 결립물로 작용하고 있다. 진보신당이 "지향과 가치가 다른 국민참여당은 참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민노당 이정희 대표,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를 비롯한 12개 정당·사회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민주노동당 회의실에서 열린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추진 대표자 회의'도 참여

당 문제로 논란 끝에 3시간 만에 휴회했다. 이날 진보당 조 대표는 "민노당 이정희 대표가 참여당의 새 진보정당 참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민노당은 참여당인지, 진보신당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박은지 부대변인이 전했다.

그는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된다면 진보신당은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며 협상 결렬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민노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말만 무성할 뿐 실질적 통합에는 실패하고 선거 연대 수준의 합의로 그칠 것이라는 비판적인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결국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한 뿌리에서 출발한 만큼 통합하

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있다. 진보 정당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참여하는 야권 통합은 쉽지 않겠지만 진보 정당간 통합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본다"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복잡한 방정식을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26일 민주 진보 진영 인사들이 '야권통합 연석회의'를 출범시키며 대통합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통합의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한편,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민주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국민참여당·사회당 등 야 5당에 '2012년 승리를 위한 야당 정책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비닐하우스 복구 지원

지난 31일,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된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오거리 비닐하우스를 찾아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 정치인들 수해복구 현장으로

## 홍준표·손학규·박근혜 등 휴가 전격 취소 지원 나서

중부지방의 수해로 여야 정치권에 하계 휴가가 사라졌다. 유력 정치인들은 애초 계획했던 여름휴가를 자진 반납하거나 일정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수해지역을 비롯한 민생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31일부터 휴가계획을 잡아놓았다가 수해가 발생하자 "한가하게 휴가를 즐길 때가 아니다"며 계획을 보류했다. 홍

대표는 전날 경기 연천군 수해지역을 찾은 데 이어 이번 주에는 피해지역 복구상황 및 향후 수해대책을 직접 챙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도 휴가를 취소한 채 수해 복구에 열성을 쏟고 있다. 그는 이달 말 출입기자단과 가기로 그는 이달 말 출입기자단과 가기로 그는 이달 말 출입기자단과 가기로

는 안 간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상태다.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 삼성동 자택에 머물며 휴식을 취하지만 평소와 같은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몽준 전 대표는 전날 국내의 한 휴가지로 떠날 예정이었으나 이를 취소했다. 자신의 지역구인 동작구 사당동 일대의 2000여 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자 연일 현장에 나가 복구작업에 팔소매를 건어붙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도 상황은 마

찬가지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문제로 여유가 없었던 오 시장은 설상가상으로 수해까지 겹쳐 여름휴가는 물론 주말까지도 반납했다. 김 지사의 경우는 지난달 22일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갔다 비 피해를 보고받고 휴가를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인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휴가를 반납하고 노동·환경·복지 현장을 방문한다. 한진중공업 사태에 발벗고 나선 것은 물론 노조법 재개정 등 현안에 천착하고 있다고 한다. 야권 차기주자 중 한 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문재인 노동부 장관은 경남 양산 자택에 머물며 개인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이정현 "내년 총선 광주서 출마"

"박근혜, 내 결심·용기에 흐트레 하는것 같아"

한나라당의 광주 출신 비례대표 이정현 의원이 지난 31일 내년 총선에서 광주 지역구 출마의사를 공식화했다.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의 대변인격인 이 의원은 이날 "한나라당이 호남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광주 서구에서 정당하게 출마해 한나라당의 호남 첫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황색돌풍이 일던 지난 1995년과 탄핵 역풍이 거센 2004년도에도 각각 신한국당과 한나라당 후보로 광주에서 출마했고 단 한 번도 광주 이의 지역에서 출마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호남 정서를 당내에 정확히 전달하려는 노력에 최선을 다했다. 호남 지역 예산확보를 위해 거의 전무후무하게 4년 연속에



결월에 들어갔다. '호남 예산 지킴이'라는 말을 들을 때 긍지와 자부심을 느낀다"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성과 열정으로 다가 가면 광주 시민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망했다.

이 의원의 광주 출마 공식화는

최근 같은 당 홍준표 대표가 호남에서 지역구 당선자가 나오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명직 최고위원에 총천원 인사 2명을 천거, '호남 포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오는 10월초 광주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어 총선 출정식을 갖고 12월께 선거사무실을 개소해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설 것"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내가 당선되면 호남에서 27년 만에 한나라당(전신 포함) 지역구 의원이 탄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표의 반응에 대해 "다른 의원들에게 '제가 이 의원에게 전화하면 주로 광주에서 받더라고요'라고 말할 정도로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나의 결심과 용기에 흐트레 하는 것 같더라"고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여야, 8월국회 걱정된다

FTA 비준안·반값등록금 등 현격한 이견

여야가 합의한 8월 임시국회 개최가 임박했지만 각종 안건을 놓고 여야의 입장 차가 계속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북한인권법안 ▲대학등록금 부담완화와 대학 구조조정 관련 법안의 처리에 집중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을 제외하고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쪽이다.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31일 "한나라당이 8월에 처리하려는 22개 중점법안에 민생법안은 없다"며 "정략적으로 소집되는 국회에는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미FTA 비준안과 북한인권법안 처리에 거부 의사를 나타낸 셈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원내 관계자는 "교과위에서 등록금 관련 부수법안을 심의할 것 아니냐. 민생국회가 아니라 민주당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우선 여야는 등록금 문제에 대해 다른 접근법을 갖고 있다.

민주당은 조만간 대학생들의 2학기 등록금 납부가 시작되는 만큼 본

격적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반값 등록금'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명목등록금 인하를 놓고 정부가 속시원한 예산 지원 신호를 주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한나라당 지도부도 명목등록금 인하, 소득계층별 차등 지원이나를 놓고 미묘한 입장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제안한 '한진중공업 청문회'를 놓고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즉각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가 청문회를 열어 정리하고 사태를 추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한진중공업 크레인 위에서 농성 중인 김진숙 민주노동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 등의 퇴거가 먼저 이뤄져야 청문회가 가능하다는 맞서 있다.

이처럼 여야 간 이견이 지속되면서 한나라당 주도로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공전만 거듭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영토갈등 풀릴까

韓中日 협력사무국

내달초 서울에 설치

영토 문제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 일본과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한·중·일 협력사무국이 오는 9월 초에 문을 연다.

사무국은 이를 위해 서울 신문로 S타워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실무직원 모집에 들어갔다.

앞서 초대 사무총장으로 신봉길 외교통상부 국제경제협력대사가, 사무차장에는 중국의 마오닝 한반도사무실 주임과 일본의 마쓰가와 루이 참사관이 각각 임명됐다. 사무총장은 2년 임기로 한·중·일 3국이 번갈아가며 맡기로 한 바 있다.

사무국은 개소 전까지 사무총장단과 실무직원과 각국 파견직원 등 모두 30명 가까운 인원을 확보해 한·중·일 3국간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기본적인 부분부터 3국간 협력이 강화되면 장기적으로 영토문제를 둘러싼 외교 갈등을 푸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